

공 개



의안번호	제 187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6. 4. (임시 제3차)

의
결
사
항

(주)하나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6. 4.

1. 의결주문

(주)하나은행(이하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의신청인이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2020.3.4. 제4차 증선위 의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20.5.22.)함에 따라 그 당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위원회의 원조치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4. 참고사항

가. (주)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원조치(붙임1)

나. 관련 규정(붙임2)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 지>

금 융 위 원 회

결 정

이의신청인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원 결 정 2020.3.4. 제4차 금융위원회 의결
(주)하나은행 - 과태료 167.8억원

주 문 이의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금융위원회가 2020.3.4.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과태료
(167.8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원조치 부과사유

이의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녹취 의무 및 부당한 재산적 이익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은행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를 방해하였음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각 위반행위별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이의신청인의 개선 노력 등에 비추어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 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

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이유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조치를 유지함이 타당 (이의신청 기각)

(1) **(원조치의 적법성)** 이의신청인은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재산적 이익수령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고, 금감원 검사업무를 방해하였음

원조치는 ①‘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6,000만원, 위반동기는 ‘상’,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26억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②‘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5,000만원, 위반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131억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③‘녹취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5,000만원, 13건에 대한 위반동기는 ‘상’, 4건에 대한 위반동기는 ‘중’, 위반 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8억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④‘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5,000만원, 위반동기는 ‘상’, 위반결과는 ‘보통’으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⑤‘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5,000만원, 위반동기는 ‘상’,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⑥‘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1억원, 위반동기는 ‘상’,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 동 부과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이의신청사유의 부존재)** 설명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녹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수령 금지규정 위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설명의무 위반

- **(위반동기)** 거래신청서의 기재 누락 사실을 체크하지 못한 단순 과실 (경과실)이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자본시장법」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 44건 모두 설명서 교부조차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어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위반건수 조정)** 위반건수를 44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PB별로 포괄하여 4건으로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PB별로 설명의무 위반의 양태를 분석해보면, 시간적으로 설명의무 이행 및 미이행이 혼재되어 있어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조각되므로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감경조항 적용)**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설명의무 위반 44건 모두 설명서 교부조차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감경조항을 적용하기는 곤란함
- **(자기구속의 법리 해당 등)**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시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법리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2019.6.17.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마련한 「과태료 법률상 최고 한도액 10배 초과시 감경 처리방향」에 의거 감경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18.11월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이미 법률상 부과 상한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자기구속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부당이익 환수적 성격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단순히 과태료 규모가 많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상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명백하고 과태료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교부사실 확인) 설명서 교부 사실을 고객으로부터 확인 받지 않은 것을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상품설명서 교부 사실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확인 받지 않은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님
 - 거래신청서상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에 아무런 체크가 없어 설명서의 교부 또는 고객의 거절이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하였음
- (미교부 사실 입증 미흡) 고객들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판매서류, PB 작성 경위서, 여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수궁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설명서 등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증빙을 제시할 경우 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단 한건도 입증되지 않았음
- (위반건수 조정) 위반건수를 438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PB별로 포괄하여 110건으로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PB별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의 양태를 분석해보면, 시간적으로 설명서 교부 및 미교부가 혼재되어 있어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조각되므로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자기구속의 법리 적용)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시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법리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2019.6.17.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마련한 「과태료 법률상 최고한도액 10배 초과시 감경 처리방향」에 의거 감경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18.11월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이미 법률상 부과 상한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자기구속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부당이익 환수적 성격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단순히 과태료 규모가 많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상과 같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가 명백하고 과태료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녹취의무 위반

- (녹취오류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등) 기계적 문제 등으로 제대로 녹취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녹취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녹취오류건은 위반동기를 '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잡음만 녹취하거나 녹취 대상 투자자 또는 판매자가 식별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녹취가 되지 않은 경우는 녹취의무 위반에 해당함
 - 녹취에 대한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녹취오류건을 수개월간 방치해오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으로써 위반행위의 동기를 '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후녹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등) 기계적 문제 등으로 제대로 녹취되지 않은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재녹취한 것이므로 녹취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녹취오류건은 위반동기를 '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판매가 완료된 이후 녹취를 하나의 절차로서만 진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함
 - 사후녹취는 기존 녹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녹취를 진행했음에도 불완전판매 이슈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볼 때 정당한 사유에서의 재녹취로 인정하기 어려워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상과 같이 녹취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명백하고 과태료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지 의무 위반

-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여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가 아닌 재산적 이익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수령 금지’와 달리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적 이익수령 금지’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수령한 재산적 이익의 크기 등은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 재산적 이익 제공자의 성격, 세미나의 목적, 수령자의 선정방식 및 이익 제공방식, 이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산적 이익 수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하나은행이 DLF 매매를 권유한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이 ■■■■■■가 발행한 DLS 매매를 권유하는 것과 동일한 점, 세미나가 ■■■■■■ 상품 판매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중전 사례 비교) 2013.5.28.자 ■■■■■■ 지적사례 등 중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이익 제공자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유일한 기초자산인 DLS 발행자인 ■■■■■■ 및 그의 Back-to-Back 거래상대방인 ■■■■■■ ■■■■■이고, 이익제공 목적이 DLS를 펀드형태로 판매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전 지적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처분사유가 명백함
-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동기를 ‘상’으로 본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본건이 본점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음
- 위반금액이 과태료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부당이익 환수적 성격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므로 은행이 실제로 수취한 재산적 이익 금액보다 과태료 규모가 많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상과 같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지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명백하고 과태료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의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사후적 관점에서의 제재 적용) 본건 제재가 사후적 관점에서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란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적용 및 운용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내부통제기준이 형식적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
 - 하나은행은 무리한 목표제시를 통해 펀드판매를 독려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내부통제기준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등한시*한 것이므로 이는 엄연한 법규위반임
- * ① 영업현장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현행 내부통제기준의 불비사항 파악 및 정비의 시작점이란 점과, 금번 검사결과 점검계좌의 1/2이 법규위반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의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적합성 원칙) 내규 등에서 투자성향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금감원 지적내용들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인정한 사안이거나 법상 의무가 없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PB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완전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내규 등을 허술하게 마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내규 등에 판매절차를 기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외형상 체계만 갖추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을 은행의 편익에 따라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반영하거나, 법령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은행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법규 위반을 초래하였으므로 은행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설명 의무·설명서 교부의무) 내규 등에 상품제안서를 설명서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상의 문제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사모펀드 판매시 활용되는 상품설명서를 혼동하거나 설명서 교부의무 자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혼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482건, 전체 점검대상의 24.7%) 발생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여한 기본적인 의무를 사소한 양식상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제3자 점검체계 등) 제3자 점검체계 및 적합성보고서 전산입력 방식의 문제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사정에 맞게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영진 책임) 경영진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 본점 차원에서 PB들을 경쟁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실적 증대를 도모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가운데, 특정 경영진이 펀드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한 무리한 전략목표(매년 실적 30% 증대)를 설정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 불완전판매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에는 소홀히 하여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불완전판매의 발생을 초래하였는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함
-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스터리쇼핑, 녹취의무 이행여부 수시점검, 임점 모니터링, 자점감사 등 이미 내부통제 점검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2018년 양매도 ETN 신탁상품 검사시 적합성원칙 위반 사례가 대규모 적발되어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임점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자점감사 항목 등에 이와 관련된 점검기준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동종 위법 행위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중전 사례 비교) ■■■■■ 사례에서도 부작위라는 점에서 위반 동기를 “중”으로 보았는바,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적 취급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양자가 부작위에 의한 위반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위반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차이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 사례와 동일하게 위반동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본건(하나은행) 사례	■■■■■ 사례
• 장기간 광범위하게 발생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안임	• 일회성 금융사고와 관련된 사안임
• 무리한 실적독려와 연계된 사안이므로 예측가능성이 큼	• 무리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투자중개업자로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드판매 업무와 관련됨	•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적인 업무(■■■■■ ■■■)와 관련됨

본건(하나은행) 사례	■■■■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양매도 ETN 신탁상품 검사시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사실 및 내부통제 기준상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고 이전에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문제시 된 사항이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종합검사시 내부통제체계가 외관상으로만 갖추어져있고, 실질적으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경고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개선 약속서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이상과 같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명백하고 과태료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 (자체점검 행위의 합법성) 자체점검 관련 행위가 금감원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자체점검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을 반복해온 점을 문제 삼는 것임
- (자료삭제 행위) 자료삭제 행위가 검사방해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자체점검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해온 점에 비추어볼 때 불완전판매 사실 은폐를 위해 점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자료삭제를 비롯한 일련의 은폐행위로 인하여 하나은행의 DLF 사후 대응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 등 금감원 검사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였음

- (금융사고 미보고) 자체점검 과정에서 인지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감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금융사고 미보고는 불완전판매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검사방해 행위 중 하나이므로 검사방해 관련 제재대상 사실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자체점검 은폐 허위보고) 허위진술 만으로는 검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허위진술 단독으로 검사방해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체점검 및 불완전 판매 발생사실 은폐를 위해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일련의 검사방해 행위 중 하나의 양태로서 허위진술을 문제를 삼은 것임
- (PB Q&A) 하나은행은 PB Q&A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 PB Q&A 작성의 비용부담 주체인 하나은행이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결과물을 받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실제 해당 문건은 금감원 검사 및 분쟁조정 관련 민원조사시 활용되었음
- (자료제출 거부) 범무법인 업무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DLF 사후대응 과정에서 특정 범무법인과 업무처리에 있어 다수의 법규위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권을 앞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며,
 - PB Q&A와 DLF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범무법인 ■■■을 통한 업무내역이 민원 대응을 위한 PB 법률자문 목적인다는 하나은행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자료제출 대상 정보는 금감원 검사 등에 대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가 아니므로 동 정보를 요구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짧은 시간에 다수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지속·반복적으로 자료를 허위 또는 지연제출하고, 사실관계 은폐 등을 위해 허위진술도 병행해온 점에 비추어볼 때 사소한 실수 정도로 볼 수 없음
- (과태료 감면) 본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과태료를 감면해달라고 주장하나,
 - 검사방해 행위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동기를 “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재규정상 검사방해 행위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이상과 같이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가 명백하고 과태료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결론

이의신청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그 밖에 원조치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자 함

(붙임1)

(주)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원조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을 위반한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하나은행 : 과태료 167.8억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과태료) : 설명의무 위반 26.4억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131.4억원, 녹취의무 위반 8.1억원,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위반 0.4억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0.5억원,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1.0억원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1호,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별표3]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 조치사유

가. 설명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주)하나은행 ■■■■■■■■■■센터 및 ■■■■■■■■■■센터는 2018.8.2.~2019.2.21. 기간중 일반투자자 39명을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44건(가입금액 159.0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나은행 ■■■■■■■■■■센터 등 88개 영업점은 2018.7.17.~2019.5.23. 기간중 일반투자자 426명을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482건(가입금액 1,135.7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는 등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

다.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하나은행의 ■■■■지점 등 7개 영업점은 2018.7.26.~2019.3.7.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15명을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17건(가입금액 30.5억원)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거나(4건), 판매일로부터 1~56일 이후에 사후녹취(13건)하는 등 펀드 판매시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나은행 ■■■■■■부는 2019.1.17. 18시 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호텔 ■■■■룸에서 ■■■■■■■■* 주최 및 ■■■■■■■■■■** 협찬으로 하나은행 PB 145명 및 ■■■■ ■■■■ 관련 임직원 11명을 대상으로 한 ‘■■■■■■■■■ DLF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스테이크 코스식사 및 사은품을 제공하였고

*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DLS 발행사)

**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Back-to-Back 거래상대방)

■■■■■■■부가 ELF/DLF 연간 판매실적에 기초한 ‘2018년 DLF 10인 스타’를 선정하여 1등에게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 커피머신을, 나머지 9명에게는 시가 28만원 상당의 ■■■■ 볼펜을, 아차상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시상하는 등 통상의 정보전달 성격의 세미나가 아닌 하나은행 PB들만을 위한 ■■■■■■■■ 발행 DLS 기반의 DLF 판매독려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동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와 ■■■■■■■■■■에서 부담하고 하나은행은 전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았음

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하나은행은 아래와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4조 등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음
- ■■■■ 부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경영진은 펀드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한 무리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신상품 출시 관련 사전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해외금리연계 DLF 신상품 대부분(753개 펀드 중 651개, 86.5%)이 사전심의를 누락된 채 PB들에게 공급되었고, 펀드 불완전판매가 광범위하게 발생(1,196건*) 하였으며, 2018.12월 금감원 양매도 ETN 신탁 검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금번 검사대상인 1,948건의 해외금리연계 DLF 중 61.4%에 해당(내규위반 포함)

(1)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가) 불완전판매 환경 조성

① 무리한 자산관리 전략 제시

■■■■ 부행장은 2018.5.17. ■■■■지주에 보고하기 위한 ‘자산관리 비즈니스 전략’ 보고서에서 은행의 수수료이익을 2018년 1,700억원→ 2019년 2,350억원→ 2020년 3,000억원까지 증대하겠다는 내용의 ‘자산관리 비전 2020’을 제시하면서, 자산관리 Biz 전략으로 은행 PB들에게 금투협업을 통한 One Company로서의 특화된 상품 공급을 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One WM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품공급 라인과 WM/PB채널간 유기적 연결도 언급하였음

2018.11.8. ■■■■지주에 보고하기 위한 ‘수수료이익 현황 및 증대계획’ 보고서에서는 DSR, RTI 대출규제로 인한 고성장의 어려움, 금리 안정세 및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NIM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수수료이익 증대가 절실하다고 피력하면서 사모상품 선취수수료 위주의 펀드수수료 증대계획을 언급하고 있음

선취수수료 주력시장인 특화상품/ELF·DLF와 관련하여 ‘구조화상품 기초자산 다변화’를 핵심전략으로 내세우며 PB전용 상품인 DLF 상품 판매 규모를 2018년 0.65조원에서 2019년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음

■■■■ 부행장이 위 2018.5.17. 보고서상 제시한 펀드수수료 증대 목표는 3년간 연평균 약 30%의 성장을 제시하고 있고, 위 2018.11.8. 보고서상 제시한 사모상품 선취수수료 증대 목표도 연간 41.9%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펀드 판매채널이 무리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한편, ■■■■단은 2018.10.4. 하나은행의 ‘4분기 임원간담회’에서 ‘펀드수수료 M/S 2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2019년중 1위인 ■■■은행과의 시장점유율 차이를 1%p 미만으로 줄이고, 2020년에 1위를 탈환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였음

② PB들에 대한 경쟁환경 노출 및 무리한 펀드판매 목표 요구

하나은행의 인사시스템상 ■■■■단에서 PB들의 이동·배치 의견 제시 및 승진 후보군의 추천권한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PB 직위의 부여 및 박탈, PB 등급 부여권한 등 사실상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B들은 ■■■■단의 제시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부는 매일 단위로 PB 점포별·개인별 실적을 PB게시판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PB들간의 경쟁을 유도해왔고

은행 KPI를 총괄하는 ■■■■부도 매월 PB게시판에 모든 PB들에 대해 개인별 순위 및 실적을 포함한 KPI 가평가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PB들이 서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PB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 부행장의 위와 같은 펀드수수료 목표제시 및 DLF 상품 판매규모 확대 목표제시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서 ■■■■부는 2018.11.13. 골드클럽 PB들에게 '2019년 펀드 방카 수수료 및 손님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목표는 전년대비 30%이상 설정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후 행낭 발송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실적 달성 약속서'를 제출받는 시도를 하였음

한편, 2019년 재무계획 수립시 ■■■■부에서 ■■■■부에 제시한 펀드 신규판매액 목표 수치에 따르면, 2018년도 잠정실적(10.0조원) 대비 30% 이상 증액된 13.3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다만, 펀드수수료 목표는 2018년도 잠정실적(1,158억원) 대비 13.1% 증액된 1,310억원으로 설정하였는바, 수수료율이 높은 주식형펀드 수요감소 전망, 계열사 판매규제 및 일반사모펀드 규제 등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임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 ■■■■ 부행장은 수수료이익 증대 관련 무리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DLF 판매채널인 PB들에 대해 판매를 독려하고 경쟁환경에 노출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한 반면, 이에 상응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정비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펀드상품 관련 제도 운영 실무 등을 담당하는 ■■■■부도 펀드 판매규모 증대에만 주력하고, 본부부서의 PB들에 대한 과도한 목표제시 및 판매 독려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적합성 원칙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 하나은행의 내규상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정하지 않고 펀드판매 절차를 운영함에 따라

*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경우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 가능토록 함

금번 검사대상인 1,948건 중 투자권유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한 건은 15.7%(30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4.3%(1,642건)가 과거의 투자자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DLF와 같은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펀드를 판매하면서도 기존 투자자정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 투자자성향 등급 산출 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판매자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투자자성향을 임의 상향할 경우 조작된 투자자성향이 지속·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 내용을 전산 투입할 때 은행 직원이 다르게 입력하여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검사에서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 사례*(283건, 14.5%)가 확인되는 등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실제 최장 7년 이상 전의 투자자정보를 조작·활용하여 펀드를 판매하는 사례 등

- ㉞ 고객의 투자자성향 등급만 산출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보관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지 않음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투자자성향 등급만 남아 있고 그 근거가 된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208건, 10.7%) 확인되었으며, 이후 펀드판매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투자자성향 등급 정보를 활용하여 펀드를 판매 함으로써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㉟ 하나은행은 2018.11.19.~12.12. 기간중 진행된 금감원의 양매도 ETN 실태 검사 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상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2018.12.12.)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불비사항을 즉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종 법규위반행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은행 내부통제기준상 영업점의 법규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 관련 전산차단 및 투자자정보 확인서 보관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기준 불비사항을 적시에 정비하지 않음에 따라 2018.12.13.이후에도 동종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 하나은행의 내규상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계약 및 상품제안서를 상품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판매 임직원의 금지행위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펀드 판매시 고객이 작성하는 거래신청서에는 상품설명서 교부여부를 확인 받는 란에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집합투자계약 사용'이라고 명시하는 한편,

펀드제도 주무부서인 ■■■■부의 내부 PB게시판 등을 통한 안내문에는 자산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내규, 거래신청서, 안내문상 설명서를 서로 다르게 제시하는 등 펀드판매시 은행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불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PB들이 사모펀드 판매시 교부대상 설명서를 혼동하거나 설명서 교부의무 자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혼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

해외금리연계 DLF 1,948건 중 24.7%에 해당하는 482건은 설명서 교부여부에 대한 투자자 확인을 받지 않는 등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㉞ 하나은행은 펀드판매시 고객이 작성하는 거래신청서상에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 집합투자규약 사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사모집합투자규약의 경우 설명서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해당 펀드의 수익률, 상품의 구조 및 원금손실 발생위험,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규약만을 설명서로 사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내규(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서 활용) 및 거래신청서(집합투자규약 사용)에서 정하고 있는 설명서를 서로 다르게 제시하는 등 펀드판매시 은행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불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PB들이 상품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설명서를 혼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를 치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음

- ㉞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심의 없이 DLF 관련 상품설명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③ 기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㉞ 펀드판매와 관련한 필수 구비서류의 징구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 등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금번 검사시 서류 일부가 없거나 서류상 중요 작성사항*이 기재 누락되어 있는 등 미비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음

* 날짜, 서명·날인, 자필 기재 필수사항, 각종 체크사항 등

- ㉞ 초고령자나 신규거래자 등에 대해 상품 권유시 적합한 상품임을 확인 받기 위한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하여,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DLF 등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에 대해 ‘손실이 제한적인 상품’, ‘안정적 구조의 상품’ 등 실제 상품의 특성과 맞지 않는 권유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191건* 발견되었음

* 적합성보고서 징구대상 479건 중 39.9%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은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등 불완전판매 관련 중요 점검항목을 임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자점감사 항목 등에 반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점검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금감원 양매도 ETN 검사 이후인 2019년 이후 42개 영업점에서 발생한 166건 (562억원)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적발 및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펀드판매 관련 제도 주무부서인 ■■■■■■부에 대하여 걱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지도 않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음

※ 하나은행은 2018.11.19.~12.12. 기간중 진행된 금감원의 양매도 ETN 실태검사시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법규위반 사실이 다수(140개) 영업점에서 적발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상 문제점을 인지하였음 (2018.12.12. 내부통제체계 개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

(3)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신상품 도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 내규인 「상품위원회 요령」에 의하면 신상품은 상품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부는 신규 출시한 753개 펀드 중 746개 펀드(99.1%)를 상품위원회에 부의 생략*하였고

* 동 내규에 따르면 단순히 회차를 달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산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시장환경 변화 또는 리스크 재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 생략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중 651개 펀드(86.5%)는 과거 상품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다른 종류의 펀드였음에도 상품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특히, 과거 개별 기초자산 단독상품에 대해서만 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들 기초자산을 조합하여 만든 신상품으로서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시된 펀드가 440개(58.4%)에 달하는 등 상품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아 사전심의 절차가 누락된 신상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해외금리연계 DLF 대부분이 판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상품출시 이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B들로 하여금 판매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바. 금감원 감사업무 방해 등

- ☐ 「은행법」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감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나은행은 아래와 같이 금감원 감사업무를 방해하였음

(1)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 등

(가)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자료삭제 및 사실관계 은폐

2019.6.18. ■■■■ 하나은행장이 DLF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고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DLF 이슈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결성된 비상대책반은

2019.6.25. DLF 계좌 1,93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2차례 점검을 실시하였고 최종 결과내용은 2019.8.2. 비상대책반에서 펀드 손해배상 프로세스 잠정 최종안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2019.8.5. ■■■■ 하나은행장에 대한 DLF 현황보고 익일인 2019.8.6. 점검파일 일체가 삭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2019.8.5. 은행장 보고 당시 1,918개 계좌가 손실구간에 진입(평균 손실률 △56.5%)한 상태였고, 언론에서도 DLF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자, 하나은행은 추후 예상되는 금감원 검사 등에 대비하여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결과 자료를 일괄 삭제하고 금감원에는 자체점검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일체를 지속적으로 은폐해왔음

특히, 2019.8.13. 금감원은 하나은행 ■■■부를 경유하여 ■■■■■부로부터 「금리연계 DLF 조치내용 및 대응방안」을 제출받았으나, 동 보고시에도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등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추진된 일체의 주요 추진내용이 누락 보고됨에 따라

금감원은 자료수령 직후 해당 자료를 작성한 ■■■■ ■■■■■부장에게 유선상으로 은행 차원의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이 있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했음에도 동인은 자체점검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하였고, 동 유선연락 직후 ■■■■ ■■■부장은 금감원에 직접 전화하여 DLF 자체점검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보고하였으며,

동일자(2019.8.13.) 금감원은 ■■■■ 상임감사위원회에게 유선 연락하여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여부 및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였으나 동인도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음

검사 착수(2019.8.22.) 이후에도 금감원 검사반이 하나은행의 자체적인 DLF 사후대응 실태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반의 활동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하나은행 ■■■■■부는 은행장 지시사항인 동시에 비상대책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2가지 사항(불완전판매 자체점검 및 펀드 손해배상 프로세스 논의)만 고의로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진술로 일관하는 등 사실관계 은폐를 시도 하였고,

금감원 검사반이 하나은행 포털메일 분석을 통해 확보한 자체점검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진술을 번복하고 자체점검 사실 및 펀드 손해배상 프로세스 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도 해당 점검 및 논의 내용이 은행장 지시사항과는 무관하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검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은행의 사후대응 관련 사실 관계 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 등 금감원 검사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였음

(나)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를 위한 금융사고 미보고

하나은행 ■■■부는 2019.6.3.~6.7. 기간중 DLF 불완전판매 샘플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본시장법 및 은행 내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정상적인 검사 절차로의 전환 없이 이를 종결하였고

2019.7.1.~7.5. 기간중 ■■■부 ■■■팀 인력을 전원 동원하여 DLF 1,936개 계좌에 대한 1차 서류 전수점검을 실시했을 때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102건, 적합성원칙 위반 30건, 실명확인증표 재사용 80건 등 법령위반 혐의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본 검사로의 전환 없이 동 정보를 ■■■부에 전달만 하고 종결하였음

하나은행 ■■■부는 금감원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금융사고 보고를 이행할 경우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및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적인 책임소재 규명 등의 절차 없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임감사위원회도 동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

(다) 은행장의 불완전판매 점검 지시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 경위서 제출

2019.6.18. ■■■ 하나은행장이 DLF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 ■■■부 부장은 2019.6.19. 자신이 작성하여 배포한 회의록에 기재한 은행장 지시사항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한다고 2019.10.14. 금감원 문답시 진술하였음에도

2019.10.25. 은행장 문답 일정이 최종 확정(13시 40분경)된 직후인 14시 15분경 ■■■ 부장이 금감원 검사반을 방문하여 금감원 검사반이 요구하지 않은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은행장 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기존 진술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검사반의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을 유도하고자 시도하였음

* “실제로는 간단한 당부 말씀을 하신 것이었음에도 실제로 없었던 지시사항을 제가 임의로 추가하여 회의록에 지시사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

(2)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등을 통한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가)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및 불완전판매 사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이용

2019.8.20.~8.21.경 하나은행 ■■■■단 ■■■■ 전무는 PB들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과 협의하여 'PB 불완전판매 Q&A'(이하 "PB Q&A")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후 ■■■■부 ■■■ 부장 및 ■■■■부 ■■■ 부장의 협조 하에 PB Q&A 작성이 진행되었으며, 2019.8.26. 완성본이 만들어졌음

이와 관련하여, PB Q&A는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관련 조사 또는 금감원 검사의 상황을 가정하고, 6가지 유형별 예상 가능한 질문 111개 및 이에 따른 답변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형태로 작성되었는바,

제시된 답변은 PB들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숨기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금감원 검사시 제기될 수 있는 본점 책임론에 대비한 본점 보호 취지의 답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실제 본건 금감원 검사시 일부 PB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PB들이 PB Q&A 답변대로 답을 하는 등 PB Q&A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나) 하나은행 ■■■부의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관여

하나은행 ■■■ ■■■부장은 2019.8월말경 ■■■ ■■■■부장 및 ■■■ ■■■ ■■■부장으로부터 법무법인 ■■■에서 PB Q&A를 작성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9.8.28. 저녁 법무법인 ■■■과의 민원 관련 회의 종료 후 ■■■측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PB Q&A 출력물 1부를 제공받았으며,

동인은 익일(2019.8.29.) ■■■부 ■■■■팀 ■■■ 팀장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하고 리뷰를 지시하였는바, ■■■ 팀장은 ■■■■팀 팀원을 동원하여 PB Q&A 내용에 대해 점검한 후, 2019.9.2. PB Q&A상 답변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을 법무법인 ■■■에 제시하기 위해 별도의 문건을 작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 ■■■부장은 PB Q&A의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장으로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수정 의견 제시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PB Q&A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

(다) 법무법인 ■■■과의 업무내역 관련 자료제출 거부

금감원 검사반은 하나은행이 법무법인 ■■■을 통하여 PB Q&A를 작성하여 활용한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에 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1,936개 계좌)를 일시에 넘기거나 DLF 관련 본부부서 직원 36명의 메신저 및 이메일 자료 일체를 넘기는 등 DLF 이슈 관련 변칙적인 사후대응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직접적인 확인 및 책임관계 규명 등을 위해 2019.9.20., 2019.9.23. 및 2019.9.25. 총 3회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해 관련 DLF 관련 법무법인 ■■■과의 업무협약의 내역 자료의 제출을 하나은행에 요구하였으나 하나은행은 검사종료시까지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위법행위 혐의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한적으로 밖에 확인하지 못하는 등* 금감원 검사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였음

* 하나은행의 PB Q&A 작성·활용은 「은행법」 및 「금융위설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검사방해 및 분쟁 조정위원회 업무방해)가 있고, DLF 고객 금융거래정보의 법무법인 앞 제공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비밀보장의무 위반)가 있으며,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이메일 자료의 법무법인 앞 제공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 등)가 있어 동 행위의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자료제출 거부

(3)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 관련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가) 부적합확인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

2019.8.26. 금감원 검사반이 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검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금리연계 DLF 판매 현황 및 부적합확인서 징구 여부 등 펀드 판매 상세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하나은행 ■■■■■부는 2019.7월중 2차례에 걸쳐 실시한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을 통하여 부적합확인서 징구 누락 계좌가 23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적합확인서 징구 누락 계좌가 없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 검사반은 자료제출 요구시 작성양식에 ‘부적합확인서 징구여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부 ■■■■ 차장은 ■■■부 ■■■■ ■■■■과 협의하여 ‘부적합확인서 징구여부’가 아닌 ‘부적합확인서 대상여부’로 작성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2019.9.2. 금감원 검사반에 해당 자료 제출시 자료작성 기준 변경 사실을 구두로 알리거나, 제출자료에 동 사실을 주석 등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금감원 검사반이 포털메일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결과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불완전 판매 점검 방법론 수립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나) 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 지연 제출

2019.9.4. 금감원 검사반이 금리 연계 DLF 불완전판매 검사를 위해 '투자자정보분석 결과표'를 포함한 가입서류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하나은행 ■■■■■부는 수차례 면담을 통한 검사반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산에 보관되어 있는 '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가 없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자료제출을 지연시켰으며

최초 요구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2019.9.25.에야 일부 계좌에 대해서만 투자자정보분석 결과표를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켜 금감원 검사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였음

(다) 적합성보고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

2019.9.24. 금감원 검사반이 하나은행의 자체 불완전판매 점검 결과 확인된 적합성 보고서 징구 누락 계좌 23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DLF 상품 가입시점의 적합성보고서 등 당시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하나은행 ■■■■■부는 전산시스템 확인을 통해 영업점 직원이 임의로 적합성 보고서 등 가입 서류 일부를 사후 보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후 보완된 서류(4건)를 제시하며 상품 가입 시점에 적합성보고서가 적정하게 징구되었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라) 녹취 리스트 및 녹취파일 지연 제출

2019.9.5. 금감원 검사반이 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검사를 위해 상품 판매시 녹취 파일 및 해당 녹취 리스트를 요구하였으나,

하나은행 ■■■■부는 금감원 검사반의 2차레 추가 서면요구(2019.9.16. 및 9.23.) 및 수차레 면담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료의 정합성은 확인하지 않은 채, '녹취 시간 10초 미만 계좌' 6건 및 '중도 해지 계좌' 21건을 녹취 리스트 및 파일에서 임의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며,

금감원 검사반이 은행 제출자료를 신뢰하고 검사를 진행하여 관련 사항의 검사가 사실상 완료된 시점(2019.10.22., 당초 검사종료 예정일의 3일전)에 하나은행 ■■■ ■■■부가 위규사항 소명을 위해 녹취리스트의 일부 누락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최초 요구일(2019.9.5.)로부터 49일이 경과한 2019.10.24.에야 최종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로 인해 금감원 검사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였음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6.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0. (생략)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49. (생략)

②~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자문업자가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 범위
다. 투자자문 제공 절차와 투자자문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규모 및 산정방식
라. 그 밖에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략)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3~13. (생략)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생략)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8.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10.~14.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제2항 관련)

4.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포함)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버.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5	10,000
서.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5호	2,000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게 준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은행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2100-2676	02-3145-7062